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전북 자치경찰 출범 2년 맞아

“지구대·파출소 빠진 자치경찰 무의미”

“인력·예산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안 반영되길”

인력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가 11일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던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아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예정된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도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강도있게 비판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직전 기존 관할인 '생

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에 순찰·범죄 예방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위원회는 자치경찰이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세종·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통과로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위는 지난 4월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전북을 추가 참여지역으로 권고하기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형규 위원장은 지난 5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경찰위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했으며, 곧 있을 경찰위의 권고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출한 공동건의안을 조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1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목조목 주장하고 나섰다.

제출된 공동건의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현행 '경찰법' 등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실질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신규 채용·승진·전보·장계 등을 행사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단)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재원 확보는 필수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균등하게 계정으로 국비 지원하고,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죄금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형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건의한 이상의 4가지 사항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장으로써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삶이 치안의 목표가 되는 서비스의 변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전라북도 참여 △수요자 중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등 나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기반 마련,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의 일하는 태도 변화를 위해 애써 왔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체감형 치안정책 마련을 위해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공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해 상설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물췌 탄력운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끝으로 이형규 위원장은 “큰 틀에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전북도, 이용호 의원실과 전북특별법 부처 설득 협력

전북도는 11일 이용호 국회의원의실에서 문체부 관계자들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문화·관광분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영 지원을 위해 이용호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문화·관광분야 특례에 대한 전북도의 설명 및 부처 의견 청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사항은 △케이팝 국제교류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디지털유통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국제의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특례 등 8개의 문화·체육·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필수 특례다. /김재훈 기자



염봉섭 예결위원장 이기열 윤리위원장

남원시의회, 예결위 윤리위 구성·위원 선임

예결위원장 - 염봉섭 의원
윤리위원장 - 이기열 의원

남원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염봉섭 의원(사진), 부위원장에는 이숙자 의원을 선출하고, 위원에는 윤지홍·오동환·김영태·김한수·이미선 의원이 선임됐다.

염봉섭 위원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또한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기열 의원, 부위원장에는 오창숙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는 소태수·손준영·김정현·강인식·한명숙 의원이 선임됐다.

이기열 위원장은 “남원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의원들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인구감소 대응, 실질적 실무 추진이 뒷받침돼야’

김성수 도의원,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조례 대표발의
“인구감소 위기 효율적 대응·극복 위한 ‘첫 삽’에 불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감소지역 1곳이 관심 지역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있어 도와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이렇다 할 의사소통 및 실질적 실무 추진을 위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양상이 과거와



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감소 규모도 크게 확대됐지만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추진체계로 대응한다면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이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도와 도내 시·군 간 긴밀한 협조와 상생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

존복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라북도도와 도내 시·군 소속 과·팀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질적 실무추진기구이다.

그간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추진기구가 존재했으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해 조례로 규정할 것은 전국 최초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극복을 위해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의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수소산업 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최형열 도의원 대표발의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심의 '논의'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전북도가 수소산업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권 조항 신설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성·운영과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재훈 기자

Advertisement for 'Seaside Bathing' (해수욕장 일제개장) in Buan-gun. The ad features a vibrant blue and green background with illustrations of people swimming and sun umbrellas. The main text reads '더위가 무섭고 부안으로 가면 되지 여름 핫하게 즐기자!' (Don't be afraid of the heat, if you go to Buan you'll enjoy the summer hotly!). Below this, it says '부안군 해수욕장 일제개장' (Buan-gun Seaside Bathing Opening) and '7월 7일~8월 15일까지' (July 7th to August 15th). At the bottom, there are five small images showing different beaches: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and 위도해수욕장.